

반고 1천537개, 특수목적고 148개, 특성화고 498개, 자율고 161개교가 있다.

학생 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65년 25만4천95명에서 1990년 147만3천155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전문계고는 1965년 17만2천436명에서 2010년 46만6천29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학생 수는 일반고 127만8천8명, 특목고 6만7천529명, 특성화고 30만2천21명, 자율고 14만708명이다.

일반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7천894명에서 2010년 9만735명으로 늘었고 전문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6천214명에서 2010년 3만5천688명으로 늘었다. 2015년은 일반고 9만878명, 특목고 7천245명, 특성화고 2만6천588명, 자율고 10만288명이다.

고등교육

■ 전문대학

전문대학 수는 1965년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교로 증가했고, 이후 199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에 161개까지로 늘어났다. 이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현재 138개교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965년 2만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 16만5천5명, 2003년 92만5천96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학생 수 감소 및 4년제 대학의 선호로 2009년 76만929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전문대 학생 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72만466명으로 떨어졌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57.5%였다가 1970년 72.6%로 높아졌으나 1975년부터 1985년 사이 감소추세를 보여 50~6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86.5%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에는 61.4% 수준이 됐다.

■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80년 100개교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89개교가 됐다. 국·공립 대학교가 1965년 14개교에서 2015년 35개교로 늘었고, 사립대학교는 1965년 56개교에서 2015년 154개교로 증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학생 수는 1965년 10만5천64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104만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06만5천451명, 2012년 210만3천958명, 2013년은 212만296명, 2014년 213만46명, 2015년 211만3천293명이 됐다.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05년 65%, 2006년 67.3%, 2008년 68.9% 등으로 높아졌지만 2009년 68.2%로 주춤했다가 2013년 55.6%, 2014년 54.8%로 떨어졌다.

교육계 동향

■ 누리과정 예산갈등 계속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누리과정(취학전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사업)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시·도교육청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고 보육기관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소요액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누리과정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이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만을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으면서 추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 세계교육포럼…서울선언 채택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교육부가 세계교육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참가국들과 유네스코는 향후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9년의 초·



▲ 2015 세계교육포럼 둘째 날인 5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청년·성인들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기회를 강조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업기술교육훈련,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인류에 보편적인 평화, 인권, 다양성 등을 가르치는 세계시민교육이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로 처음 명시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회 폐회사에서 “한국은 이번 포럼에서 설정된 교육 의제들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 태국 줌티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15년 만에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유네스코,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여성기구, 유엔난민기구,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직접 참석했으며, 전 세계 167개국에서 교육 분야 장·차관 등 1천500명이 참가했다.

■ 서울 공립교 교사들 집단연쇄 성추행 사건

2015년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여러 명의 남자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들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처음 불거지자 특별감사를 실시, 남자 교사 5명이 지난 2년 7개월간 동료여교사 5명과 여학생 40여 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 남자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여러 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주며 자신의 성적 환상을 수업시간에 늘어놓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번이라도 교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외에도 다른 지역의 중·고교에서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되는 등 교단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 헌법재판소, 법외노조 조항 합헌...전교조 지위 흔들

합법노조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의 지위가 큰 타격을 입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재 결정으로 전교조의 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다만, 9명 때문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교조가 승소하고, 합법성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죄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에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2015년 9월 4일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치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2차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2015년 4월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이 두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첫 번째 행위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두 번째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 교권 침해 사건 이어져...‘교원지위향상법’ 국회 통과

2015년 12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교교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장면을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6월부터 해당 기간제 교사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

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단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량 급증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도 꾸준히 늘었다. 폭언과 욕설은 2010년 1천241건에서 2014년 2천531건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었고, 성희롱은 같은 기간 31건에서 8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기류 속에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해 추락한 교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을 막고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하는 일도 금지됐다.

교원지위향상법은 2013년 5월 발의됐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다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학사 구조 개편과 함께 정원을 총 5천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대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또 전문대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E등급은 2016학년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이 제한된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이번 감축인원 규모까지 포함하면 1주기(2014~2016년)에 4만7천여 명을 줄일 수 있어 당초 감축목표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8월 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서울 소재 4년제 일반대학의 절반 정도가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된 일반대 34개교 가운데 서울 지역 대학이 16개교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 일반대 21개교 가운데 4개교(19.0%)가 A등급이고 인천은 A등급 대학이 없다.

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 소재 일반대 101개 가운데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13.9%)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들의 성적표가 저조했는데 최상위 A등급으로 평가받은 일반대 34개 대학 중 지방거점 국립대는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 3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